

광양 '법정 문화도시' 지정 총력

서면평가 통과 후 현장 평가 대상지 선정 키움·동행·공정·교역 문화교역도시 추진 11월 말 결정...지정 시 국비 100억 지원

광양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전을 선언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6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신청해 8월 서면 검토를 거쳐 현장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장검토 이후 종합발표회를 거쳐 11월 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지정 공모는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한 전국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말 서면 검토와 온라인 인터뷰를 거쳐 광양시를 포함한 총 30개 도시를 현장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광양시는 2017년부터 5년간 광양을 일원에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문화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정재봉 작가 등 광양 근대 문학가들의 테마 골목길 조성, 광양과 연관된 스토리 발굴 및 동화책 제작,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공간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광양시는 항만으로 대표되는 짧은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방식은 달라도 가치가 모이는 문화교역도시 광양'이라는 비전 아래 키움, 동행, 공정, 교역의 핵심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문화시민으로서 성장을 돕고(키움), 현재 마주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서로 함께 해결하며(동행), 차별 없는 평등함과 공정함의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 국내외의 공정 문화 산물들이 광양항만을 허브로 자유롭게 교류되고 유통되는(교역) '대한민국 대표 문화교역도시'로의 도약을 담고 있다.

탁영희 문화예술과장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광양만의 다양한 문화를 잘 여여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은 관심과 참여를, 행정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문화도시 지정과 성공의 요소다"고 말했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은 현장검토 이후 조성계획을 보완해 종합발표회를 거쳐 11월 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해 성과 여하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고흥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마쳤다. /고흥군 제공

고흥 소록도 사적 지정 학술대회 근대역사 가치·의의 간직 공감대

고흥군이 지난 7일 마리안브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소록도 근대역사 유적의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소록도 주민, 고흥군민 등 30명으로 현장 참가자를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첫 번째자로 나선 김재형 교수는 "국립소록도병원 역사가 오래됐을 뿐 아니라 복잡한 성격으로 인해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독특하고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소록도병원 역시 그 역사성이나 독특성, 그리고 보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 이곳을 보존하고 잘 가꿔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백미영 소록도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소록도박물관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을 위한 박물관을 위한 박물관이다"며 "모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꾸준히 생산되는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 수집된 자료들에 집중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옥희 남도학연구소 이사는 문화재가 건축물 또는 유품 등과 같은 유형적인 자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소록도의 모든 곳에는 한센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한센인들의 삶의 내력이 쌓여 있으므로 그 의미를 지켜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생활문화와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유산이므로, 소록도 한센인이 살아온 삶을 의미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 강동진 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적, 공간적, 사회적 변화상을 분석해 소록도의 변천과정 속에서 지켜야 할 348개소의 보전자산과 52개소의 필수보전자산을 추출했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소록도를 위한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이자, 한센인 소멸 후 소록도 보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곡성, 농가 맞춤형 현장교육

곡성군은 최근 시설 운영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5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및 딸기 수경 재배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수강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미리 신청받아 수경 재배시설 운영기술과 스마트팜 설비의 적정사용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결정하고 농가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정식부터 재배 시 유의점을 비롯해 원수 및 처방에 따른 양액 제조 방법, 양액 설비 점검 및 센서 관리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농업기술원 연구 결과인 딸기 수량 우수 농가의 환경관리 방법을 적용한 스마트팜 제어기 활용법에 대해 학습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도 모색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곡성토란 선별작업 분주 국내 토란 최대산지 곡성군에서는 토란 공동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추석 토란 수요를 감안, 최대한 많은 토란을 선별해 유통시키기 위해 농가의 손길이 분주하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토란 잔뿌리 제거에서 선별, 포장까지 시간당 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 의견 수렴

현장·온라인 설명회 개최

여수시가 8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시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민과 유

족들의 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법 제정 내용과 후속 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 등에 대한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 첫 순서로 여수시 환경민 총무과장이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와 후속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지역사회연구

소 이영일 이사장이 위원회 활동과 피해 신고 일정,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시민과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순사건 관련 상담 장구를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애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 및 지원 시책 검토를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여수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국비 등 약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단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에 무단교통단속장비 32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도 국비 포함 약 7억 원을 들여 22개소에 22대를 확대 설치해 총 54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을 주고 저속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노란신호등과 횡단보도 투광기를 약 7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1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만큼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와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곡성 오산초, 텃밭정원 가꾸기

곡성군 오산초가 텃밭 학습장을 조성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및 생활 속 원예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산초 학생들은 개인별로 작은 상자 텃밭을 분양받아 텃밭의 이름부터 작물의 종류와 위치까지 직접 디자인하며 자신의 개성을 살린 작은 농장을 꾸렸다. 학생들은 직접 식물을 키우며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책임감과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수확한 채소를 맛보며 채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년 시절 원예 활동은 감수성 발달과 생태적 사고를 위해 중요하다"며 "텃밭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연과 농업에 흥미를 느끼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고흥경찰서, 자치경찰 사무추진 간담회

고흥경찰서가 지난 7일 자치 경찰 사무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예방과 안전대책, 노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계획, 대형 교통사고 예방 긴급 대책, 학교폭력 예방 정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정책 추진 경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흥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을 위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주민 밀착 치안 행정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자치단체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보성소방서, 대형판매시설 현장지도

보성소방서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비해 지난 7일 전통시장과 대형판매시설을 방문해 현장지도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다중이용집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 컨설팅으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지도는 소방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긴급연락

망 구축, 소방 관련 의견 청취 등을 내 용으로 진행됐으며,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조재춘 보성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판매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 된다"며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